

전북자치도,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 총력

농업 피해 최소화 위해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재해예방사업·교육에 2043억·농가 경영안정망 지원 1731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비상 체제로 운영한다. 상황실은 초동대응, 재해복구, 축산분야 등 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기상 특보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기상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피해 규모 파악부터 응급 복구까지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상이변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배

수개선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노지·시설작물, 인삼, 축사 등의 폭염 예방 등 8개 사업에 총 2,08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신규 도입된 시설하우스 폭염 예방 사업은 고온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도는 취약 지역 농업시설물(과수원, 시설하우스) 1,07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수를 마쳤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김제, 부안 등 논농 주산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정비와 양수기 가동 실태(14개 시군 2,128대)를 정밀 점검했다.

또한, 도내 저수지 2,153개소 및 저지대 노후축사 등 재해 취약 축산시설 20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

하여 재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4개 분야에 8억원을 투입, 재해 대응 역량을 집중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농업인이 재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력을 키우고, 현장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농작업 안전관리자 선발과 안전리더 양성을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 체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보조구 시연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옥외 전광판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재난 대응 요령을 실시간 전파하여 기상 상황별

행동 수칙과 재난 안전 정책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이 고온기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대과대,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손해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보험금 조기 지급을 통한 경영 회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양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1,731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생계수단 요건이 폐지되어 농업 외 소득과 관계없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며 농가간위피해를 50% 이상인 경우 피해규모와 가구원 수에 따라 경영안정지원금 차등 지원과 농업법인 대상 정책 지원 규정 신설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망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1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 긴급 기자회견
전북 도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가?
일시: 2026년 5월 21일 오후 1시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도민 개·돼지 빚댄 모욕 안될 말”

전북발전연합회, 김관영 도지사 후보 캠프에 즉각 사죄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회장 최현양) 회원 10여 명은 2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 캠프를 향해 “전북도민을 개·돼지에 빚대어 모욕했다”며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동력을 전북발전의 기회로 연결할 정책과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기에 도민들은 참담하고 충격적인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새만금 세계 잠버리 사태와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 수출계약 논란, 인공태양(핵융합) 국가 연구 사업 대응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북의 미래가 걸린 시점에서 반복된 실책에도 김관영 캠프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만호 기자

이어 “16일 김관영 캠프가 전북도민을 개·돼지에 빚대 표현하는 역대급 망언을 쏟아냈다”며 “도민 혐오를 유발해서라도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확산되자 김 후보 캠프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 비유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신 회피와 도망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전북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관영 캠프는 알파한 말장난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깊은 상처를 입은 170만 전북도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끝까지 사죄를 외면한다면 도민의 분노는 반드시 표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만호 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실현... 출생아 반등세 이어가

전북형 맞춤형 인구정책 성과 가시화... 출생아 수 2년 연속 증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특별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도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데 이어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북형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2023년 6.622명에서 2024년 6,78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7,041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5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61명 늘어 3.85% 증가했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419명 증가한 수치다. 전북 출생아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반등세가 이어지며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4년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gh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청년과 신혼 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취업·결혼은 가깝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전북형 반향 주택’은 전국 최초로 ‘한 자녀 출산장려 주거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입주 시 임대보증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거주하다가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월 임대료가 전액 감면되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전북도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한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장수군·남원시·임실군에 총 300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선정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2단계 공모 대상으로 진안군과 순창군이 선정돼 총 200세대 규모 프로젝트를 2031년까지 공급 계획이다.

보육과 돌봄 분야 정책도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

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초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정책과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

난민 진드기 지원과 난민 시술비 추가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단기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생활 기반 확충, 돌봄과 교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만호 기자

22일부터 지선 후보자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전북토론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TV토론회'를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TV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 82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도 의원선거 및 시장·군수선거의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전북토론회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시청률 제고를 위해 선거기간(5월 21일부터 사전투표기간 전일인 5월 28일까지)을 후보자 TV토론회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 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TV 토론회를 지상파 방송(KBS전주방송, 전주MBC, JTV전주방송)을 통해 중계방송 한다.

방송일에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debates.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및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1만호 기자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탄소중립 선도지로 도약

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서 추진상황 점검 결과 의결 작년 온실가스 294만톤 감축... 2년 연속 목표 초과 달성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점검 결과, 온실가스 294만톤CO2eq을 감축하며 당초 목표 대비 101.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도는 2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의 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도 조례에 따라 실시했으며, 도 자체 점검과 한국환경공단 전문 컨설팅, 과제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7개 부문 72개 세부과제 가운데 사업 종료 및 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47개 과제를 제외한 88개 과제다. 점검 결과 65개 과제(95.6%)가 '달성'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돼 전반적인 이행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293만16,229톤CO2eq으로, 당초 목표인 289만9,871톤CO2eq 대비 101.3%를 달성했다. 전체 감축효과 가운데 에너지 전환·산업 부문이 6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축산 부문 13.2%, 흡수원 부문 7.4% 순으로 집계됐다.

감축량 달성률은 농축산 부문이

1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수원 부문 104.5%, 수송 부문 102.2% 순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투입된 총예산은 5,763억 원 규모로, 수송 부문에 전체의 32.7%가 투입됐으며 에너지 전환·산업 부문 30.8%, 농축산 부문 21.7% 순으로 예산이 집행됐다.

도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단순한 환경규제가 아닌 '생명경제' 실현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년 연속 감축 목표 초과 달성은 전북이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정청래 당대표의 사당화 지지 범도민대책회의 회원 70여 명은 20일 “사당화의 폭거를 멈추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전북 대도약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당대표 사당화 반드시 저지해야”

범도민대책회의 회원, 민주주의 회복·전북 민심 존중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당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도민대책회의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공정성과 민주적 운영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당화 지지 범도민대책회의(상임대표 나춘균) 회원 70여 명은 이날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 모여 “사당화의 폭거를 멈추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전북 대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도민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축제가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춘균 상임대표는 헌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사당화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외치며 집회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비웃고 우산을 착용한 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가며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1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벽보 오늘부터 철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1,919 곳에 철폐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하여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